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flux of the Living Population of Young People in Population Decline Areas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 Population, Temporary Population, and Foreign Population Influx

임 태 경*

Taekyoung Lim

■ 목 차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III. 분석의 방법
- IV. 실증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 계명대학교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4. 9. 2. 심사기간: 2024. 9. 2. ~ 2024. 10. 29. 게재확정일: 2024. 10. 29.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청년층의 생활인구, 체류인구, 정주민구, 외국인인구,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he influx of young people as resident populations, temporary populations, and foreign populations in a short-term perspective. This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whe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resident population, particularly in region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or regions of population interest, to derive outcomes for attracting young people as living populations. The study examines 107 local government areas, including 89 basic local governments categorized as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18 basic local governments identified as areas of population interes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results by setting these areas as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targeted projects implemented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s and the influx of young people's living populations in these population decline or population interest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s the proportion of youth projects planned throug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s allocated to population decline or population interest areas increases,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influx of young people as temporary populations in these areas.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rojects planned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ourism as well as industry and employment, funded by allocations from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serves as a motivating factor influencing the inflow of young foreign popul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 least for attracting young people as temporary and foreign populations in population decline or population interest areas, financial expenditures from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s play a positive role. The degree to which inefficient investments can be controlled when allocating these funds may determine their success. Therefor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attract young living populations through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 Keywords: Living Population of Young People, Temporary Population, Resident Population, Foreign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Areas,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주인구 확보 경쟁은 이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고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에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등장과 함께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2022년부터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시행중에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하며(최훈, 2023), 2023년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인구가 생활인구 개념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생활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조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생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환경구축 마련이 선행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안소현 외, 2023).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로 구성된 생활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생활인구의 일회성 지역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방문으로 이어져 이것이 곧 지역사회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작동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 및 향후 개선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인구가 잘 유입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다소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의 증대를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에(이상림, 2020),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핀셋으로 선택하여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재정지출효과의 유무를 진단하고 향후 정주를 위한 내국인의 청년층과 체류하는 청년층, 외국인 청년층의 유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향식의 지원방식이 아닌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투자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기금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는 각각 중점을 두는 기금투자 계획이 모두 상이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획한 사업 비중이 26%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비중이 24% 22%로 나타나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0%이상을 문화·관광 분야나 혹은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에서 많은 수의 문화관광 관련사업을 기획하는 이유는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하동원, 2023),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충완·배정아, 2023).

〈표 1〉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사업비중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문화관광	103	26%	14	34%
산업일자리	93	24%	9	22%
주거	84	21%	10	24%
교육	43	11%	2	5%
노인의료	24	6%		2%
보육	16	4%	4	10%
교통	11	3%	-	0%
기타	19	5%	1	2%
총합계	393	100%	41	100%

출처: 나라살림 353호 브리핑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집행현황」(2023.12.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결국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에 정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대안적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생활인구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인구를 포괄하는 사전적 개념으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모두 포괄하여 생활인구로 칭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33호) 이러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 차원에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하혜영·임준배, 2024)

〈표 2〉 생활인구 구성 및 요건

생활인구	1.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2. 체류인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3. 외국인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처: 하혜영·임준배(2024)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33호).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구혁신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¹⁾ 민간 이동통신데이터를 활용하고 법무부 및 통계청과 협업하여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를 2024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하여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는 월별 데이터로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생활인구에 관련된 맞춤형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통계청, 2024; 이원도·김영룡, 2024).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05.17.)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00426#none

2.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관한 논의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한 대상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한 사업의 비중은 총 사업의 15%에 해당되며 그 외의 사업은 비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총 434개의 사업중에서 총 66개의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확인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수가 31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분야(22개), 문화관광분야(8개), 교육 및 기타분야(4개) 순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세부사업은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분야에서는 청년마을조성사업 및 청년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등을 통해 지역에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청년층 및 주거취약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청년층의 생활인구 및 관광인프라 구축, 청년예술가 및 문화형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대상 사업비중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청년사업	59	15%	7	17%
비청년사업	334	85%	34	83%
총합계	393	100%	41	100%

출처: 나라살림 353호 브리핑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집행현황」(2023.12.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또한 최근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련된 몇몇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층의 지역방문이 특히 중요할 수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영호(2021)의 연구에서는 소멸위기 지방도시에서 청년층은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으로서 역할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년층의 생활인구가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과 청년들이 유희공간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허문구(2022)²⁾의 연구에서는 청년인구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중 청년인구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재생력이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업과 결부된 창업환경을 청년층들에게 중점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진경·김도형(2020)의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감소시켜 지역 산업기반의 약화를 불러올수 있는 악순환의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창생법 및 창생종합전략(2020-2024)을 사례분석하면서 지방대학 진흥, 고등학교 기능강화 등으로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학업 취업으로 인한 지방으로의 귀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성 마련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창원(2024)의 연구에서는 최근의 청년들은 자기의 사정에 따라 일하고 쉬는 것을 반복하는 깃 워커(GIG worker)로써의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청년의 초단기 노동의 수요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청년층의 지방기피를 막는 해결책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통해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확장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정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의 사전적 개념을 근거로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 집행의 영향력으로 인구감소지역 내로 청년층의 생활인구가 유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대를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층’을 핀셋으로

2) 허문구(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택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H1(연구가설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정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생활인구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III. 분석의 방법

1. 분석단위 및 분석방법

1) 분석의 단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022년에 인구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의 사전적 개념을 근거로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과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효과가 20세이상에서 40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측면에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해당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23년도를 본 연구의 분석시점으로 설정하되 정부의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변수는 1년의 시차효과를 적용하여 2022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Gujarati, 1999)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변수는 1년의 지연효과로 변환하여 분석결과를 추정하였다.

〈표 4〉 분석대상 표본 수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시	15	10
군	69	1
구	5	7
총 단체수	89	18

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 분석의 모형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관심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효과와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Hausman 검정 결과의 p값이 0.01보다 작았음을 확인하고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다(Amini, S.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op1_{st} = \beta_0 + \beta_1 FundImplementation_{s(t-i)} + \beta_2 FundSoft_{s(t-i)} + \beta_3 FundYoungP_{s(t-i)} + \beta_4 FundIndustry_{s(t-i)} + \beta_5 FundCultures_{s(t-i)} + \beta_6 X_{st} + \beta_7 T + \beta_8 S + \delta_{st}$$

[모형1]

$$Pop2_{st} = \beta_0 + \beta_1 FundImplementation_{s(t-i)} + \beta_2 FundSoft_{s(t-i)} + \beta_3 FundYoungP_{s(t-i)} + \beta_4 FundIndustry_{s(t-i)} + \beta_5 FundCultures_{s(t-i)} + \beta_6 X_{st} + \beta_7 T + \beta_8 S + \delta_{st}$$

[모형2]

$$Pop3_{st} = \beta_0 + \beta_1 FundImplementation_{s(t-i)} + \beta_2 FundSoft_{s(t-i)} + \beta_3 FundYoungP_{s(t-i)} + \beta_4 FundIndustry_{s(t-i)} + \beta_5 FundCultures_{s(t-i)} + \beta_6 X_{st} + \beta_7 T + \beta_8 S + \delta_{st}$$

[모형3]

위의 [모형1]의 추정식에서 $Pop1_{st}$ 은 [모형1] 추정식에서의 종속변수를 뜻하면 생활인구 개념 중에서도 20세이상 40세이하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에 청년층의 체류인

구 수를 뜻한다. $Pop2_{st}$ 는 종속변수로서 각각의 지역(s)과 시간(t)에 20세에서 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순유입 된 주민등록인구수를 나타내며, 또한 $Pop3_{st}$ 는 [모형3]에서의 종속변수를 뜻하면 생활인구 개념 중에서도 20세이상 40세이하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수를 뜻한다. $FundImplementation_{s(t-i)}$ 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i$)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FundSoft_{s(t-i)}$ 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i$)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를 뜻한다. $FundYoungP_{s(t-i)}$ 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i$)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대상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뜻하며 $FundIndustry_{s(t-i)}$ 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i$)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뜻한다. 또한 $FundCultures_{s(t-i)}$ 는 각각의 지역(s)과 시간($t-i$)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되는 모든 변수는 시차변수으로써 $t-i$ 년도까지의 지연효과를 의미하며 i 는 지연된 시간(년도)를 뜻한다. 본 논문의 모든 분석모형에 적용된 지연효과에 해당되는 최적의 시차(lag) 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a(AIC)의 정보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Schwarz Information Criteria(SIC)기준으로 적정시차를 결정하면 단위근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테스트의 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Hamilton & Susmel, 1994) 적정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AIC 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IC 기준의 1년의 시차에서 최소값이 나타나 적정시차를 1로 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차분한 자료를 토대로 Augment Dicky-Fuller(ADF) 검정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ADF 검정통계량이 5% 유의수준 임계치보다 커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어 연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태경, 2022). 또한 X_{st} 는 통제변수로서 각각의 지역(s)과 시간(t)에 대해 관광인프라 환경, 지역적 환경, 일자리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T 와 S 는 시간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고정효과이고 δ 는 각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통상의 순수한 오차항을 뜻한다(Hamilton & Susmel, 1994).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1]과 [모형2], 그리고 [모형3]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에 해당되는 체류인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모형1]에서는 청년층의 체류인구수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모형2]를 통해 청년층의 순유입된 주민등록 인구수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모형3]를 통해 청년층의 외국인인구수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청년층의 생활인구 중에서도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주

민등록인구, 청년층의 외국인등록인구 유입에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변수의 선정,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종속변수와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크게 청년층의 주민등록상 순유입된 청년인구수, 청년층의 체류인구수, 청년층의 등록외국인수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에 대한 단일한 연령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³⁾, 동시에 통계청 및 에서 제공하는 5세 및 10세 구분별 인구이동통계자료와 생활인구통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20세 이상 40세이하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정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1]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생활인구 개념 중에서도 20세 이상 40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수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체류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로써 특정 시점에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인구수를 뜻하며, 체류인구는 정확한 인구수를 표현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변동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이며 월 1회 이상인 방문자를 체류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4년부터 수집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통신 모바일 자료를 결합하여 지역별·연령별로 체류인구 규모 산정결과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의 [모형1]에서는 2024년도 1/4분기 시점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수집·조사된 20세이상 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수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1]의 종속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련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⁴⁾를 통해 수집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2]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생활인구의 개념 중에서도 20세

3) 우리나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의 조작적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의 경우 18세 이상 34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다.

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50000&bid=246&act=view&list_no=431960
<https://data.kostat.go.kr/nowcast/newBigDataBrdMgr.do?boardId=1&menuId=4&subMenuId=1&isPopup=Y>

이상 40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순유입된(전입-전출) 인구수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해당자료는 행정안전부 각 지역별 통계연보자료를 토대로 수집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3]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생활인구 개념 중에서도 20세이상 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등록외국인수(재외동포거소신고자 수 포함)로 측정하여 [모형3]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해당자료는 법무부에서 제공되는 외국인등록자료⁵⁾를 토대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배포되고 있는 현황자료를 토대로 수집되었다.

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내로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며 특히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효과와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인과관계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대상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산출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의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의 정책 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니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 및 목표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하는 사업 수 및 해당사업의 예산에 대한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이 중심이 돼서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 또한 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 수의 비중을 많게 기획해 청년인구 유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많은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대상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변수는 기획된 사업의 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Gujarati, 1999) 1년의 시차를 주어 측정되었으며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의 나라 살림 353호-브리핑 자료」(<http://firiall.net/report/5466>)를 통해 수집되었다.

5) <https://www.moj.go.kr/immigration/1569/subview.do>

6) 송윤정(2023.12.7)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 배분현황, 나라살림 브리핑, 나라살림연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 받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본 연구의 두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았다 할지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회에 산정책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도에 걸쳐 집행을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총 509개 중 사업 전체 집행률 평균이 26.1%로 나타날 정도로 107개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사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수준의 지역 간의 격차는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높을수록 재정집행의 효과로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을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변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코딩되었으며,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및 집행금액에 대한 관련자료는 「모두의 나라살림 353호-브리핑 자료」(<http://firiall.net/report/5468>)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하는 한시 재원으로써 시행 첫해(2022년)에는 준비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4분기부터 기금배정이 시행된 특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실적을 모두 토대로 집행률을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산출하여 본 연구의 세 번째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기업의 집적과 산업집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환경은 고용기회의 증대 및 임금상승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Lucas,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본 연구의 세 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변수 또한 기획된 사업의 집행을

구소

7)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주요이슈

8) 송윤정(2023.12.7)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 배분현황, 나라살림 브리핑, 나라살림연구소

통해 재정지출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Gujarati, 1999) 1년의 시차를 주어 측정되었으며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의 나라살림 353호-브리핑 자료」(<http://firiall.net/report/546>)를 통해 수집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문화·관광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산출하여 본 연구의 네 번째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서충완·배정아(2023)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서의 문화관광 영역에서의 재정지출은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는 전략을 마련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문화·관광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이 높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일수록 더 많은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문화·관광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본 연구의 네 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변수 또한 기획된 사업의 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Gujarati, 1999) 1년의 시차를 주어 측정되었으며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의 나라살림 353호-브리핑 자료」(<http://firiall.net/report/546>)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번째 독립변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할당된 전체 사업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 비율을 사용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관심지역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정주 및 생활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기금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일부 지자체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인구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나타냈다. 이상호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하드웨어 사업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설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문화활동,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여 수요가 충분할 경우 하드웨어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에 집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집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수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총 사업 중 소프트웨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일수록 더 많은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되는 다섯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Hamilton, 1994), 독립변수 이외에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인프라 환경, 지역적환경, 일자리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우선 본 연구의 첫 번째 통제변수로서 지역별 관광인프라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등록하였지만,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인구를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관광인프라 환경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유입되는 생활인구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이원도 외, 2023) 본 연구에서도 지역별 관광인프라 환경을 크게 주요 유료관광지점 수,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객의 총수, 총 숙박시설수로 측정하여 관광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해당변수는 모두 자연로그 값으로 적용하여 사용되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 예산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재정세출액을 관광환경에 관련된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서충완·배정아(202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재정지출 중에서도 문화관광 영역에서의 재정지출은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해당변수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기능별 세출 예산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재정세출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분류 중에서도 문화관광(60)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으로 산출하여 사용되었으며 1년의 시차를 주어 측정되었으며 관광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는 지방재정연감과 한국관광 데이터랩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분석자료가 구축되었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내에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질적인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력이 낮을 수 있고 이러한 재정적인 환경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도입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해(윤설일·김정숙, 2022), 본 연구에서도 지역환경 중에서도 지자체의 재정환경에 관련된 재정자립도 지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우선 지금까지의 체류인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체류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체류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⁹⁾ <https://datalab.visitkorea.or.kr/>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으며(안소현 외, 2023) 특히 도시화율이 높은지역으로 더 많은 체류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전 연령대(20대~70대)에 해당되는 전체 체류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년층의 생활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변수를 지역의 인구학적 환경에 관련된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지역의 인구 규모는 경제적 집적 수준을 반영하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의 통제변수로써 포함되었고, 해당변수는 주민등록 인구수로 측정되었다. 해당자료는 통계청에서는 2024년부터 수집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통신 모바일 자료를 결합하여 산출된 지역별·연령별로 체류인구 규모 산정결과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각 지역별 통계연보자료를 토대로 수집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지역의 일자리환경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민보경 외, 2023), 특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산업환경은 젊은 층의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차건환·임수하, 2023).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환경을 지역 내 총 제조업 관련 사업체 수를 통해 측정하고,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력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해당수치를 자연로그 값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다음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조작 방법과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자료출처
종속 변수	생활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구) 20대이상-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순유입 인구수 • (체류인구) 20대이상-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수 • (외국인인구) 20대이상-40세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외국인인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모바일 자료를 결합한 통계청 배포 자료¹⁰⁾
독립 변수	지방소멸 대응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살림연구소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자료출처
통제 변수	관광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문화및관광(분야코드:60)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의 1년 후 지연효과(단위:백만원) 주요 유료관광지점 수의 자연로그 값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객 총수의 자연로그 값 총 숙박시설 수(관광호텔, 숙박업기타, 숙박업(생활), 여관업, 여인숙업, 일반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총합)의 자연로그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연감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데이터랩
	지역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 전체체류인구수 주민등록인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통계연보 통신3사(SK 텔레콤, KT, LG U+)의 모바일 자료를 결합한 통계청 자료
	지역의 일자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사업체수의 자연로그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통계연보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다음 <표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에 위치한 지역내로 순유입 된 청년층의 인구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대략 512명이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롭게도 최대 2,915명의 청년층이 순유입되고 있는 지역 또한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대 이상 40대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이면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청년 인구수의 평균값은 대략 53,362명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4,250명 최대값은 203,919명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의 등록 외국인 수의 평균값은 대략 2,110명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57명 최대값은 29,338명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외국인들 또한 특정지역으로 집중하여 몰리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방문하는 전연령대의 체류인구 전체의 평균값은 대략 202,719명, 최소값은 12,812, 최대값은 680,527명으로 나타나 체류인구가 방문하거나 머무는 지역간의 격차도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0)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50000&bid=246&act=view&list_no=43196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14%에 해당되는 기금을 청년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를 모두 청년사업으로 기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비중의 평균값은 17.895%로 나타났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비중의 평균값은 28.409%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는 비교적 산업·일자리 분야보다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더 많이 기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당 문화관광 재정 지출액은 평균 75.33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288.872백만원, 최소 2.876백만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주요 유료 관광지 수는 평균 8.096개, 주요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는 평균 338,439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총 숙박시설 수의 평균은 3.060개로, 최대 65개에서 최소 0개까지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10.753이었고, 주민등록 인구수는 평균 약 70,358명, 제조업 사업체 수는 평균은 약 906개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의 특성

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년층의 순유입된 인구수	107	-4538	2915	-512.476	858.783
청년층의 체류인구수	107	4250	203919	53362.15	40499.39
청년층의 등록 외국인수	107	57	29338	2110.047	4077.116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사업수 비중	107	0	100	14.943	21.873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07	0	100	17.895	23.387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산업·일자리 사업 비중	107	0	100	21.655	22.384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문화·관광 사업 비중	107	0	100	28.409	27.412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107	0	100	32.686	31.464
문화관광 영역에서의 1인당 세출액	107	2.876	288.872	75.333	48.572
주요 유료관광지점 수	107	0	27	8.093	6.088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객 총수	107	0	2413083	338439	392200
숙박시설 수	107	0	65	3.060	8.167
재정자립도	107	4	26.8	10.753	4.458
전체체류인구수	107	12812	680527	202719.1	119770.6
주민등록인구수	107	8847	278554	70358.45	54313.01
제조업 사업체수	107	80	7838	906.523	1079.635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 0.3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Wooldridge, 2003).

2. 실증분석결과

다음의 <표 7>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 내의 청년층의 생활인구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의 사전적 개념을 근거로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 집행의 영향력으로 인구감소지역 내로 청년층의 생활인구가 유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내의 20세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대를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핀셋으로 선택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정주민구 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청년층, 외국인의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추정(post-estimation)으로서 모형설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amsey Reset 검정을 수행한 결과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에 의한 모형설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Gujarati & Poter, 1999) 또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형1][모형2][모형3] 모두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avin, N. E. et al., 1977)¹¹⁾.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의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모형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11)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의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 내의 청년층의 체류인구를 증대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을 통해 해당기금의 재정지출은 인구감소지역 내의 청년층의 체류인구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전략과 투자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각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중에서 각각의 세부사업을 운영 하는 정도와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류영아, 2022),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이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지출 조합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모형1]의 분석결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유료관광지의 입장객 총수가 한 단계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내의 랜드마크로써 역할될 수 있는 관광지의 존재유무가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동인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나 관광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청년층 관광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모형1]의 분석결과를 통해 주민등록인구수가 많고 지역내로 유입되는 전체 체류인구수가 많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일수록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이 증대되는 것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역의 인구규모는 지역의 집적 경제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활동의 기회와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규모가 큰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분석결과가 도출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일정 시간 동안 지역에 머무는 전

연령층의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 또한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체류경험과 지역기반 활동을 제공할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청년층의 체류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도출된 결과일 가능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역방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류경험과 지역기반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형2]의 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로 청년층의 정주인구 순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강력하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모형2]의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제조업 사업체수가 한단계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정주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산업·일자리 및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환경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지역의 일자리 상황이 청년층의 지방정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이며,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의 방향성이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한다(도수관, 2023; 임태경, 2024). 또한, 본 연구의 [모형2]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그리고 주민등록인구수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청년층의 정주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것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자체 내에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질적인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지역일수록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청년층의 정주인구 순유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출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의 인구규모 또한 지역의 집적 경제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경제활동의 기회와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순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는 [모형3]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증

대가 인구감소지역 내로 청년층의 외국인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유입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중점 프로젝트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에서¹²⁾,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 혹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을 기획할 때 문화·관광 영역에서의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게 생활인구 중에서도 외국인의 정주인구 및 외국인의 체류인구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방문동기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을 확대해가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모형3]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비중이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력있는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기회가 많은 환경은 청년층에 해당되는 외국인 인구 유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내의 외국인인구의 유입은 또 다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어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단순기능인력 혹은 전문인력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내로 많이 유입 및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1][모형2][모형3] 모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에서 제조업 사업체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이 한단계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와 10%의 수준에서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숙련 위주의 제1차 제조업 혹은 제2차 제조업에 관련된 일자리의 존재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일지라도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청년인구를 유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대학의 해외 유학생 및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청년층의 노동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청년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조업 일자리와 연계하여 마련

12) https://www.moef.go.kr/sns/cardNews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68619

하는 정책적 방향성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1] 청년층의 체류인구	[모형2] 청년층의 주민등록인구	[모형3]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독립 변수	지방소멸대 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	113.358** (55.219)	-5.150 (3.398)	-14.267 (10.27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	111.492** (43.811)	0.211 (2.163)	1.044 (9.77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청년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89.599*** (57.800)	-3.342 (2.568)	-16.321 (9.91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71.597 (73.837)	3.432** (3.255)	25.873** (11.78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의 비중	-1.056 (66.950)	-5.181 (3.651)	26.731** (11.084)
통제 변수	관광 인프라 환경	문화관광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재정지출액의 1년후 지연효과(단위:백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In_주요 유료관광지점 수	6001.810 (1655.473)	64.814 (104.076)	78.312 (346.833)
		In_주요 유료관광지 입장객 총수(단위:명)	1031.259** (446.325)	-37.201 (25.899)	66.386 (101.494)
		In_총 숙박시설 수(단위:개)	821.749 (491.918)	264.726 (125.777)	204.655 (245.478)
	지역적환경	재정자립도	521.117 (461.455)	64.260** (31.624)	332.126 (166.479)
		전체 체류인구수	0.133** (0.051)	0.002** (0.001)	0.026** (0.011)
		주민등록인구수	0.298*** (0.017)	0.008** (0.004)	0.009*** (0.003)
	일자리환경	In_제조업사업체수	5639.079** (2467.259)	115.118* (168.553)	966.564* (682.009)
	Constant			20640.627** (14013.014)	-450.287** (357.759)
Observation			107	107	107
R^2			0.90	0.31	0.62

*' p<0.1, '**' p<0.05, '***' p<0.001

[모형1][모형2][모형3]을 통해 도출된 해당분석결과 값은 민감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차를 데이터가
변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해 도출되었음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활력의 증진시키기 위해 청년층의 지역방문이 특히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이 높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집행된 배분액 중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함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인구유입을 통한 인구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중심적인 사업기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과성이 취약하다는 냉소적인 비판이 등장하고 새로운 답을 찾거나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는 측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실정에서(이재원·홍준현, 2023)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금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일자리 영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사업수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지역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주인구가 증가함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역내에 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청년층의 정주인구 순유입과 청년층의 외국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많은 산업일자리 기회가 있는 환경은 청년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하며(이유철·김찬호, 2020; 임태경, 2023)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¹³⁾. 최근 청년층의 외국인의 지역유입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면 지역 내외국인 유입은 인구증가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경제활성화 및 1인당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허출원 건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외국인 생활인구가 지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산업 및 제조업 일자리 중심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경상남도 11개 시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졸업 후 제조 중소기업에서 유학생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조업 중에서도 저숙련 부문과 고숙련 부문에 해당되는 일자리정책을 투트랙으로 기획하여 정주를 위한 내국인의 청년층과 중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청년층의 유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목적의 외국인 생활인구의 증가가 인구감소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 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이재원·홍준현, 2023),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역 관광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외국인 관광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전략마련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향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위케이션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공간 및 다양한 체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청년층의 인구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내 빈 공간을 활용한 위성사무실 유치, 위케이션 중개 단체 설립 검토, 생활인구들의 체류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련된 우수사례를 검토등을 통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사업 추진을

13)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56>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실증 분석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패널 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유입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층의 생활인구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 관심지역에서 청년층의 체류인구, 정주인구, 외국인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원. (2024). 우려스러운 청년층 직(GIG)근로자의 증가. 여성소비자신문. Retrived from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103>(검색일: 2024년9월1일).
- 류영아.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지방세논집」, 9(2): 1-23.
- 민보경·최지선. (2023).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6(4): 41-60.
- 박순철·도수관. (2023).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2): 309-346.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서충완·배정아. (2023).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222-240.
- 안소현·이순자·민성희·김민아·전봉경·강민석. (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안. 「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
- 윤선일·김정숙. (2022).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45-76.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Health Welfare Issue & Focus」, 395: 1-9.
- 이상호·서룡·박선미·황규성·김필. (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기본연구 2021-12, 한국고용정보원.
- 이원도·김영룡. (2024). 인구감소지역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17-133.
- 이원도·이소영·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유철·김찬호. (2020). 혁신도시 개발성과의 평가와 검증에 관한 연구: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1): 47-67.
- 이재원·홍준현. (2023). 「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과제.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수도권·비수도권·같은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 정영호. (2022). 「양양군 생활인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강원연구원.
- 조희평. (2023).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세재정Brie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차건환·임수하. (2023).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 「국토지리학회지」, 57(2): 111-128.
- 최훈. (2023). 정주인구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먹고 즐기고 일하는 인구. 「KDI 경제정보센터」, 5.
- 하혜영·임준배. (2024).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 보고서.
- 허문구. (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황광훈·오윤석·홍석현. (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 연구논총」, 24(1): 123-152.
- Amini, S., Harris, P. J., & Wilton, D. T. (2012). *Coupled boundary and finite element methods for the solution of the dynamic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 (Vol. 7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Gujarati, D. N., & Porter, D. C. (1999). *Essentials of Econometrics (Vol.2)*. Singapore: Irwin/McGraw-Hill.
- Hamilton, J. D., & Susmel, R. (1994).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and changes in regime. *Journal of econometrics*, 64(1-2): 307-333.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 Wooldridge, J. M. (2019).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s with unbalanced panels. *Journal of Econometrics*, 211(1): 137-150.

임 태 경: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Ph.D. in Urban Studies and Public Affairs, 2017)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Multilevel Governmental Efforts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Adop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Innovation in Clean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Evidence from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Energy Policy, 2021)” 등이 있다(Email: tklim@kmu.ac.kr).

